

[www.kef.or.kr](http://www.kef.or.kr)

# 2025 e경제 · 경영정책 리포트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Weekly Newsletter



## < contents >

- ▶ 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원회 통과에 대한 공동 입장문」 발표 (2.24)
- ▶ 경제6단체, 2025년 제1차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 개최 (2.21)

### ◆ 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원회 통과에 대한 공동 입장문」 발표 (2.24) (미래혁신팀 02-3270-7372)

- 경총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함.

\*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 < 주요내용 >

-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함.
-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임.
-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 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임.
-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함.

### ◆ 경제6단체, 2025년 제1차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 개최 (2.21) (고용정책팀 02-3270-7450)      \* 보도자료는 경총플라자(www.kefplaza.com)에 게시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이하 경제계)는 2월 21일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와 공동으로 2025년 제1차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를 개최

- 특히 올해부터 여성계(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명)가 추진본부 공동대표단에 합류해 기존 5인에서 6인 공동대표\* 체제로 확대

\*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 : 손경식 경총 회장(경제계),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금융계), 이광형 KAIST 총장(학계), 박장범 KBS 사장(방송계), 진우스님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종교계),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여성계)

- 이날 공동대표단 회의에서는 ‘우리아이 우리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2025년 추진본부 사업에 대한 각 부문별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

- 경제계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과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저출생 정책의 실수요자인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대국민 저출생·고령화 정책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

문의 : 경제분석팀(02-3270-7376)

## < contents >

- ▶ 한국은행, 「경제전망(2025년 2월)」 발표 (2.25)
-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발표 (2.25)
- ▶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27)
- ▶ 통계청,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발표 (2.25)
- ▶ 통계청, 「2024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2.27)
- ▶ 한국은행, 「2025년 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발표 (2.21)

### ◆ 한국은행, 「경제전망(2025년 2월)」 발표 (2.25)

○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25년 1.5%, 2026년 1.8%로 전망

※ 지난 '24.11월 전망 대비 2025년 성장률 전망치는 0.4%p 하향 조정,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동일하게 유지

※ 지출항목별 증감률 '24년 실적치(속보치 기준) 및 '25년, '26년 전망치(% , 한국은행) :

[민간소비] 1.1('24)→ 1.4('25)→ 1.8('26)      [재화수출] 6.3('24)→ 0.9('25)→ 0.8('26)

[건설투자] △2.7('24)→ △2.8('25)→ 2.5('26)      [설비투자] 1.8('24)→ 2.6('25)→ 2.0('26)

- 올해 경제성장률은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난 11월 전망치(1.9%)를 크게 하회하는 1.5%로 전망
- 2026년에는 통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있으나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2025년 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전망('25년 1.5%→ '26년 1.8%)

○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달러환율 상승에 따른 상방요인과 낮은 수요압력, 정부 물가 안정대책 등 하방요인이 상쇄되면서 11월 전망에 부합한 1.9%로 전망

○ 2025년 경상수지는 최근 통상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흑자규모가 지난 11월 전망(800억 달러)을 하회하는 750억 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24년 16만명에서 2025년 10만명으로 둔화될 전망. 2025년 실업률은 2.9%로 전망(2024년 11월 전망치와 동일).

○ 한국은행은 향후 전망경로상에서 글로벌 무역갈등의 전개 양상이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인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안적 시나리오를 분석

- (낙관 시나리오 : 무역갈등 조기 완화) 미국이 올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 기본 시나리오\* 대비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2026년에는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할 경우, 국내 성장률은 기본전망 대비 2025년 +0.1%p, 2026년 +0.3%p 높아질 것으로 예상. 물가상승률은 2025년중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2026년에는 기본전망보다 +0.2%p 높아질 것으로 추정.

\* 국내정치 불확실성 및 美 관세정책 기본 시나리오 :

[국내정치 불확실성] 올해 1/4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4분기 이후 점차 해소되면서 하반기중 경제심리가 이전 수준을 회복  
[美 관세정책] 미국은 주요 무역적자국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관세를 금년중 부과(24.11월 전망 때 예상했던 것보다 관세정책이 조기 시행되고 인상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통상환경 불확실성도 증대)

- (비관 시나리오 : 무역갈등 심화) 미국과 여타국이 상호보복하에 금년중 큰 폭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에도 고관세를 유지하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 이 경우 우리 성장률은 2025년 기본전망 대비  $\Delta 0.1\text{p}$ , 2026년에는  $\Delta 0.4\text{p}$ 가 될 것으로 예상. 물가상승률은 올해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2026년에는 기본전망보다  $\Delta 0.3\text{p}$  낮아질 것으로 추정.

##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발표 (2.25)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존 3.00%에서 2.75%로 0.25%p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 한국은행은 2023년 1월(3.50%) 이후 2024년 8월까지 20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 2024년 10월, 11월에는 기준금리를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 1월에는 동결을 결정(3.00%)했고, 2025년 2월에는 0.25%p 인하를 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인하하기로 결정

\*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률 추이(% , 통계청) : 1.6(24.9)→1.3(10)→1.5(11)→1.9(12)→2.2(25.1)

\*\*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 추이(% , 전기대비, 한국은행) : 0.3(23.4q)→0.0(24.1q)→0.8(2q)→0.9(3q)→0.6(4q)

## ◆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27)

< 고용 부문(25.1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종사자 수) 사업체 종사자는 1,98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2천명( $\Delta 0.1\%$ ) 줄어들며 감소세로 전환

- **(입·이직)** 입직자는 10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명(△9.6%) 감소했고, 이직자는 112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5천명(△3.0%) 감소

#### < 근로실태 부문('24.1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명목 임금)**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460만 8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5천원(4.0%) 증가
- **(총 근로시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7.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0시간 (3.3%) 증가
  - ※ '24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1일 증가(20일→21일)

#### [ 2024년 연간 근로실태 ]

- **(명목 임금)** 2024년 연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407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11만 3천원(2.9%) 증가
- **(총 근로시간)** 2024년 연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4.9시간으로 전년대비 1.3시간(△0.8%) 감소
  - ※ 2024년 연간 근로시간 감소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간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대비 1일 감소한 데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자 수 증가한 데 기인

#### ◆ 통계청,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발표 (2.25)

- 2023년 12월 임금근로일자리에서 일한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63만원으로 전년대비 2.7%(10만원) 증가했고, 중위소득\*은 278만원으로 전년대비 4.1%(11만원) 증가
  - \* 소득을 크기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

#### < 기업 특성별 소득 >

- **(조직형태별 평균소득)** 회사법인(413만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정부·비법인단체 (352만원), 회사외 법인(348만원), 개인기업체(218만원) 순
- **(기업규모별\* 평균소득)** 대기업(593만원), 비영리기업(349만원), 중소기업(298만원) 순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영리성이 있는 기업체를 매출액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
- **(종사자규모별 평균소득)** 종사자 수 300명 이상(477만원), 50~300명 미만(364만원), 50명 미만(271만원) 순

- **(산업별 평균소득)** 금융·보험업(753만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전기·가스공급업(675만원), 국제외국기관(510만원), 정보통신업(502만원), 광업(500만원), 제조업(469만원),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36만원),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415만원) 등 순

## ◆ 통계청, 「2024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2.27)

### 〈 2024년 4/4분기 가계동향 〉

- 2024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1만 5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8% 증가(실질 소득 2.2% 증가)
  - \*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1인 가구 및 농림어가 포함)
  - ※ 가구당 월평균 소득 분기별 증가율 추이(%) : 3.9(23.4q)→ 1.4(24.1q)→ 3.5(2q)→ 4.4(3q)→ 3.8(4q)
  - 소득항목별로 정상소득은 510만 4천원(전년동기대비 3.6% 증가)을 기록했고, 정상소득 중 근로 소득은 324만 1천원(2.3%), 사업소득은 109만 1천원(5.5%), 이전소득\*은 70만 9천원(5.6%)을 기록. 비정상소득\*\*은 11만 1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1% 증가
    - \*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등)은 전년동기대비 7.3% 증가, 사적이전소득(부양의무자, 친인척 등에게 받은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1.9% 증가
    - \*\* 정기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경조소득, 보험 탄 금액 등)
- 2024년 4/4분기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분위(하위 20%)가 121만 3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했으며, 소득 5분위(상위 20%)는 1,119만 9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
  - **(1분위 소득)** 정상소득은 사업소득(△7.9%), 근로소득(△4.3%)\*은 감소했으나, 재산소득(25.8%), 이전소득\*\*(7.8%)은 증가. 비정상소득(27.0%)도 증가
    - \*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24년 2분기(△7.5%) 이후 3개 분기 연속 감소
    - \*\* 공적이전소득은 9.0% 증가, 사적이전소득은 4.7% 증가(전년동기대비 기준)
  - **(5분위 소득)** 정상소득은 재산소득(15.5%), 사업소득(9.8%), 이전소득\*(6.4%), 근로소득(0.5%)이 모두 증가. 비정상소득(16.2%)도 증가
    - \* 공적이전소득은 4.1% 증가, 사적이전소득은 11.1% 증가(전년동기대비 기준)
- 2024년 4/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8배로 전년동기(5.30배)대비 0.02배p 하락하여 상·하위 가구 간 소득분배 개선
  - \*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목적으로 「가구 처분가능소득 ÷  $\sqrt{\text{가구원수}}$ 」로 산출(OECD기준)

### 〈 2024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 〉

- 2024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9만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실질소비지출은 1.2% 증가)
  - 음식·숙박(5.2%), 주·주도·광열(6.5%), 오락·문화(7.9%), 식·료·품·비·주·류·음·료(3.8%) 등에서 지출 증가



- 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교통( $\Delta 2.9\%$ ), 의류·신발( $\Delta 1.8\%$ ), 통신( $\Delta 1.5\%$ ), 주류·담배( $\Delta 3.0\%$ ) 등에서 실질소비지출 감소

### ◆ 한국은행, 「2025년 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발표 (2.21)

- **(기업심리지수)** 2025년 2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5.3\*으로 전월대비 0.6p 하락하였으나, 2025년 3월 전망 CBSI는 88.0으로 전월대비 2.6p 상승
  - \* 전산업 CBSI 추이 : 92.5('24.10)→ 91.8(11)→ 87.3(12)→ 85.9('25.1)→ 85.3(2)
- **(제조업)** 2025년 2월 제조업 CBSI는 90.1\*로 전월에 비해 1.1p 상승하였으며, 2025년 3월 제조업의 전망 CBSI는 91.1로 전월에 비해 2.0p 상승
  - \* 제조업 CBSI 추이 : 93.0('24.10)→ 90.9(11)→ 87.1(12)→ 89.0('25.1)→ 90.1(2)
- **(비제조업)** 2025년 2월 비제조업 CBSI는 81.7\*로 전월에 비해 1.9p 하락하였으나, 2025년 3월 전망 CBSI는 85.8로 전월에 비해 3.2p 상승
  - \* 비제조업 CBSI 추이 : 92.1('24.10)→ 92.5(11)→ 87.5(12)→ 83.6('25.1)→ 81.7(2)
- **(기업경기실사지수)** 2025년 2월 업황BSI는 63\*으로 전월에 비해 1p 하락하였으며, 2025년 3월 업황전망BSI는 66으로 전월에 비해 2p 상승
  - \* 업황BSI 추이 : 69('24.10)→ 69(11)→ 64(12)→ 64('25.1)→ 63(2)
- **(제조업)** 2025년 2월 업황BSI는 65\*로 전월에 비해 2p 상승하였으며, 2025년 3월 업황전망BSI는 69로 전월에 비해 4p 상승
  - \* 제조업 업황BSI 추이 : 69('24.10)→ 68(11)→ 62(12)→ 63('25.1)→ 65(2)
- **(비제조업)** 2025년 2월 업황BSI는 61\*로 전월에 비해 3p 하락하였으나, 2025년 3월 업황전망BSI는 65로 전월에 비해 2p 상승
  - \* 비제조업 업황BSI 추이 : 70('24.10)→ 69(11)→ 65(12)→ 64('25.1)→ 61(2)



문의 : 노사협력팀(02-3270-7417)

### < contents >

- ▶ 2025년 근로감독은 고의·상습 법 위반 사업장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
- ▶ 주요 노동법제도 변경을 둘러싼 정부 및 정치권 논의 난항
- ▶ 노동계는 조기대선을 의식한 정치활동 강화 예고
- ▶ 성과급을 둘러싼 현장 노사관계 혼란 증가
- ▶ 임금교섭 타결현황

## ◆ 2025년 근로감독은 고의·상습 법 위반 사업장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

○ 고용부는 2. 26 「2025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 정기근로감독은 기존 ‘적발형’에서 ‘지원형’으로 개편하고, 단계별로 ① 근로감독 전(前) 자율개선 유도, ② 기초질서 위반 등 감독, ③ 감독 후 컨설팅을 통한 개선 지원으로 진행 예정
- 수시감독은 고의·상습 법 위반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위반, 부당노동 행위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감독 대상도 기업형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 한편, 특별감독은 중대한 법 위반\*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업장 중심으로 진행 하며 근로기준 위반과 산업안전 위반을 함께 단속하는 통합감독을 실시할 계획
  - \* ① 6개월 간 3건 이상 법위반 사업장 중 근로자의 1/3 이상, 5억 이상 체불 사업장, 사업주의 폭 행 ②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근로자 사망하거나, 3명 이상의 피해 발생 사업장 등

- 한편, 고용부는 최근 MBC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사회 이슈로 부각된 만큼 직장 내 괴롭힘 감독을 강화할 계획

## ◆ 주요 노동법제도 변경을 둘러싼 정부 및 정치권 논의 난항

- 야당은 양 노총과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활용해 노조법 제2·3조 개정, 주4일제 도입 등 노동입법 이슈화에 주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 21 양 노총을 각각 방문해 노조법 제2·3조 개정 당론 추진, 주4일제 도입 필요성 등을 주장
  -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 17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2. 24 양 노총과 함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하는 등 입법 이슈화 모색
    - ※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와 제22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폐기
- 한편, 여야는 ‘연구개발직에 대한 근로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고 이견이 지속해온 반도체특별법 합의 도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야당의 입법활동이 노동계 우호적이라고 비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 25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을 파업현장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비판하며 철회 촉구
  - 한편, 여야정은 2. 28 「국정협의회」를 개최해 반도체특별법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나 ‘연구개발직에 대한 근로시간제 적용 예외’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합의 도출 난항 우려
    - 국민의힘은 ‘연구개발직에 대한 근로시간제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 기간확대, 사후 인가 등 절차 간소화)를 활용한 절충 가능성 시사
      -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국정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참석

- 더불어민주당은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 여부 논의는 진행하되, ‘연구개발  
직에 대한 근로시간제 적용 예외’ 규정을 포함하지 않은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
- 한편, 경사노위가 계속고용 논의와 관련해 4월까지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야당은 국회 중심으로 입법 논의 추진
  - 더불어민주당은 2. 21 당내에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위원장 : 소병훈 의원)  
를 설치하고 정년연장 입법안 마련 계획
    -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 13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년연장특위  
구성을 제안
  - 반면, 정부·여당은 경사노위에서의 계속고용에 대한 노사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며,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일률적인 정년연장에는 반대 입장 표명

## ◆ 노동계는 조기대선을 의식한 정치활동 강화 예고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고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조기대선 대응 활동 착수
- 한국노총은 2. 26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해 2025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조기 대선을 전  
제로 대선 정치방침 논의
  - 한국노총은 조기대선을 전제로 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② 노조  
법 제2·3조 개정, ③ 주4일제 도입, ④ 법정 정년 65세 연장, ⑤ 공무원·교원 정  
치활동 보장 등을 ‘대선 대응 제도 변경 과제’ 설정
  - 한국노총은 2월「대선기획단」구성, 3월「대선정책 요구안 발표」, 4월 「대선후보 정책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5월「임시의원대회」를 개최해 대선방침 논의 예정
- 민주노총은 2. 11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25년 주요 사업계획으로 ① 정권퇴진, ② 노동  
기본권 쟁취, ③ 조기대선 대응 방침 수립 등으로 결정하고 대선방침 수립을 위한 내부논의  
착수
  - 민주노총은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노조법 제2·3조 개정, 초기업 교섭 제도화 등의 입  
법 요구의 공약화에 주력한다는 계획

## ◆ 성과급을 둘러싼 현장 노사관계 혼란 증가

-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다층적인 임금 및 성과급 비교를 통한 노동계의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와 관련한 노사갈등 증가
  - 특히, ① 동종·유사업체와 비교한 임금인상 요구, ② 대기업 계열사간 성과급 비교를 통한 지급요구 등이 증가하는 추세
- 특히, 철강, 금융 업종에서는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 요구 등으로 임단협 장기화 및 노사갈등 증가
  -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당진하이스코지회)는 철강업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수준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2. 1부터 파업
  -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업체노조 조합원들은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2. 21부터 상경 농성 지속
  -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기본급 250% 수준의 특별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 12. 27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지부 간부들은 요구사항 수용 등을 주장하며 2. 17부터 행장실 앞 농성
- 한편, 올해 임단협에서는 노동계가 고율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예정인 가운데 성과급 문제와 함께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으로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
  - ※ 한국노총은 2025년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7.3% 인상을 확정
  - ※ 민주노총도 조만간 2025년 임금인상 요구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금속노조는 올해 지부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월 기본급 141,300원 정액 인상 전망
  - ※ 한편, 금속노조는 '24. 12. 26 '통상임금 관련 대응 지침'을 산하조직에 시달하고 ① 사업장 통상임금 점검, ② 통상임금 재산정 요구 공문 발송, ③ 사용자의 임금체계 개편 요구에 대한 대응 등을 주문

## ◆ 임금교섭 타결현황

### 고용노동부 발표, 임금결정현황조사 결과

- ▶ 협약임금 인상률\*은 고용부가 100인 이상 사업체 10,587개를 대상으로 집계, 2024년도 1~11월 임금결정현황 제출 사업체는 4,592개(43.4%)
  - \* 노사 협약으로 정한 사전적 임금(정액급여, 고정상여금 기준) 인상률
- ▶ 2024년 1~11월 누계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잠정치)
  - (전체) 4.1%, 전년동기 4.5% 대비 0.4%p 하락
  - (규모별) 100~299인 3.8% (전년동기 4.7%), 300인 이상 4.1% (전년동기 4.5%)
    - \* 1,000인 이상 4.2% (전년동기 4.4%)

### < 개별기업 임금교섭 타결현황 >

(2025. 2. 26 현재)

번호	업 체 명	업종	일시	상급단체	내 용
12	SK이노베이션	제조	2.24	한국노총	▶ ('25년) 임협 타결 · 임금 2.3% 인상 등
11	KB국민은행	서비스	1.20	한국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 임금 2.8% 인상 · 성과급 250%(월 기준임금 기준)+200만원 지급 등
10	HD현대오일뱅크	제조	1.15	한국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 기본급 3.6% 인상 · 위기 극복 격려금 350만원 지급 · 임단협 타결 격려금 기본급의 100% 지급 등
9	하나은행	서비스	1.13	한국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 임금 2.8% 인상(일반직 기준) · 특별성과급 기본급의 280% 지급 · 특별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
8	포스코	제조	12.27	한국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 기본급(Base-up) 10만원 인상 · 경영목표 달성 동참 격려금 30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포함) 지급 · 노사화합 격려금 300만원 지급 등
7	신한은행	서비스	12.27	한국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 임금 2.8%~3.5%* 인상 * 직군별 임금인상률로 일반직 2.8%, RS직 3.0%, 사무직군 3.5% · 경영성과급 기본급의 280%(현금 230%+주식 50%) 지급 등
6	HD현대미포	제조	12.2	-	▶ ('24년) 임단협 타결 · 기본급 13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 격려금 470만원 지급 등
5	HD현대중공업	제조	11.27	민주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 기본급 13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 격려금 470만원(상품권 50만원 포함) 지급 · 설·추석 귀향비 인상(각 50만원→70만원) 등

4	SK하이닉스	제조	10.29	한국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전임직(생산직) 노조] · 임금 5.7% 인상 · 격려금 450만원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자녀 수와 관계없이 25일(3회 분할) 지원 · 장기 근속 휴가 확대(7일→10일) 등
3	한화오션	제조	10.13	민주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 기본급 11만 7,404원 인상 · 타결 일시금 및 상생격려금 370만원 지급 등
2	르노코리아	제조	10.11	-	▶ ('24년) 임단협 타결 · 기본급 8만원 인상 · 신차 출시 격려금 300만원 지급 · 변동 PI 최대 100%(약 200만원) 지급 · 스페셜 인센티브 250만원 지급 등
1	기아	제조	10.10	민주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 기본급 11만 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 경영성과금(기본급의 300%+1,000만원) 지급 ·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기본급의 100%+280만원) 지급 · 특별성과격려금(기본급의 100%+500만원) 지급 ·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



문의 : 근로기준정책팀(02-3270-7425), 의정협력팀(02-3270-7382)

## < contents >

### ○ 법안동향

- ▶ [2208348]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민), 2.21)
- ▶ [220835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2.21)
- ▶ [2208360]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2.21)

### ○ 국회동향

- ▶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2.26)
- ▶ 본회의(2.27)

### ○ 판례동향

- ▶ 위법한 징의행위가 종료된 후 추가 생산을 통해 징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된 경우, 그 범위에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 (적극) ; 부산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3나26 판결

### ○ 법안동향

- ◆ [2208348]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민), 2.21)

○ (발의 이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등의 제도 확대 필요

○ (주요 내용) 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現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現 ‘1년’ → ‘2년’으로 확대
- ③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 양육’을 추가하고, 휴직 기간(연간 최장 90일) 중 30일에 대해 급여 지급
- ④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 지급

#### ◆ [220835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2.21)

- (주요 내용) ① 가사사용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 ②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규정 삭제
- ③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 규정 삭제 등

#### ◆ [2208360]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2.21)

- (발의 이유) 현행법(장애인고용법 제33조)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①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의 범위를 現 ‘최저임금액의 60% 이상’ → ‘최저임금액의 80% 이상’으로 상향
- ②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부담금 기초액은 現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상향

### ○ 국회동향

#### ◆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2.26)

- 경총 등 8개 경제단체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 중단을 요청
  - 관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으며,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 이익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

## ◆ 본회의(2.27)

○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에너지 3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93건을 처리

※ 전날(2.26)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미상정

### [본회의(2.27) 처리 주요 법안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에너지 3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망확충법) 전력망 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등</li> <li>• (해상풍력특별법)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등</li> <li>• (고준위방폐장법)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 마련</li> </ul>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업종에 대해 세액 공제율 5% 상향(K-칩스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기업·중견기업 : 現 15% → 20%</li> <li>② 중소기업 : 現 25% → 30%</li> </ul> </li> <li>• 국가전략기술 분야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공제율이 상향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항목에 'AI' 및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li> </ul> </li> <li>•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견·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li> </ul> </li> </ul>

## ○ 판례동향

◆ 위법한 행위가 종료된 후 추가 생산을 통해 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된 경우, 그 범위에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 (적극) ; 부산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3나26 판결

위법한 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 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p><b>사실관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사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지회는 A사의 울산공장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동조합의 지회임.</li> <li>○ B지회 소속 조합원 C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B지회는 임금인상, 정규직 전환, 근무형태 변경 등을 주장하며 A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li> <li>- A사가 B지회는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불응하자, B지회는 파업을 전개하여 요구사항을 관철하기로 하고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를 가결하였음.</li> <li>- B지회 간부 및 조합원들은 공장 본관 및 1공장 진입 과정에서 경비원,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유리창을 깨뜨리고 만장기대로 상대방을 찌르는 방법을 시범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장에 진입하여 의장 11라인을 약 238분 동안, 12라인은 약 293분 동안 중지시켰음(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고 함).</li> <li>○ 이후 A사는 B지회 간부 및 소속 조합원들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공장 라인의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약 5억 3천만 원의 고정비 손해를 입었으므로, 공동하여 A사에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li> <li>- 이에 B지회는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파견법에 따라 A사의 근로자로 간주되거나 A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A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요청을 관철하기 위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li> <li>-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A사의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 및 범위 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A사의 지위, 자동차 생산 및 판매방식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매출감소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추가 생산을 통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회복되었으므로, 그러한 추정은 복멸되었다고 주장함.</li> <li>○ 1심 및 2심은 이 사건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면서,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해 약 3억 2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음.</li> <li>-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의 고정비 추정 법리는 매출과 무관하게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기만 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음(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050 판결).</li> </ul>
--------------------	--

판결요지	<div data-bbox="408 259 560 293" data-label="Section-Header"> <p>■ 관련 법리</p> </div> <div data-bbox="408 329 1391 383" data-label="Text"> <p>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8613 판결 등 참조</p> </div> <div data-bbox="424 400 1378 593"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li> </ul> </div>
	<div data-bbox="408 638 1391 692" data-label="Text"> <p>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1226 판결 등 참조</p> </div> <div data-bbox="424 732 1378 1216"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li> <li>• 이러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li> <li>• 다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이른바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제품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li> </ul> </div>
	<div data-bbox="408 1301 560 1335" data-label="Section-Header"> <p>■ 판결 요지</p> </div> <div data-bbox="408 1361 1394 1982"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추가 생산을 통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된 경우, 그 범위에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 (적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자동차 완성단계인 의장 11, 12라인이 중단되어 당일 생산 계획된 자동차 중 334대가 생산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A사의 울산1공장에서는 생산되는 자동차가 적자제품이거나 불황 또는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음.</li> <li>- 만약 부족 생산량만큼의 자동차가 생산되었다면, A사로서는 이를 판매하여 매출이익을 얻고,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회수할 수 있었던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일응 추정할 수 있음.</li> <li>-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고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li> </ul> </li> </ul> </div>

이 사건 쟁의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A사의 생산관리체계를 통한 추가 생산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회복되었으므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 이러한 생산량 회복이 이 사건 쟁의행위와 무관한 다른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 그 밖에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A사에게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회복되었는지 여부

- ① A사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차종과 사양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맞는 자동차를 생산하여 인도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어 자동차판매계약 체결부터 자동차 인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흔히 있음.
- ② 자동차의 경우 고객의 구매의사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으며, A사가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공장에서 일시적인 자동차 생산 지연이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자동차판매계약의 취소, 그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 실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자동차 생산량 감소 때문에 A사와 고객 간 체결된 자동차 판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
- ③ 대규모로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A사의 경우, ▲ 쟁의행위로 인한 작업 중단 외에 설비고장, 작업 지연, 안전사고 등 일시적 생산 저해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보완, 추가조업시스템 등 생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 노사 합의에 따라 미리 설정된 UPH(Unite Per Hour, 시간당 생산대수)의 범위 내에서 생산량·생산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음.
- ④ 또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가동 중단된 시간은 울산1공장 의장, 도장, 자체라인의 2012년 가동 계획시간인 5,217.15시간의 0.1%에도 미치지 않음.
- ⑤ 이 사건의 쟁의행위가 발생했던 2012년 8월에는 울산1공장에서 연간 사업계획에 따른 계획 생산량인 28,000대보다 12,700대 적은 15,300대의 자동차가 생산되었는데,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자동차 부족 생산량은 2012년 8월 부족 생산량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함.
- ⑥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및 2012년 8월 전체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울산1공장에서는 연간 계획 생산량인 355,000대보다 3,300대 많은 358,300대의 자동차가 생산되었고, 특히 이 사건 쟁의행위 이후인 2012년 10월~12월에는 각 계획 생산량보다 많은 자동차가 생산되었음.

#### 나. 부족 생산량 회복이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추정을 복멸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 ① A사는 생산량 증가를 위한 UPH 증가 등에 관한 노사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쟁의행위 직후(2012년 9월경) 노사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p>운영방안, 생산량 유지를 위한 완성차 기준 UPH 증가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점과 ▲ 실제 UPH(73대)가 합의된 UPH(78대) 범위 내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합의 없이도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 정도의 추가 생산 여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임.</p> <p>② A사는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여한 B지회 소속 조합원들만에 의한 추가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A사가 보유한 설비와 다수의 정규직과 소수의 비정규직의 협업 등 물적·인적 설비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동차 생산 과정 및 조직 등을 고려할 때, ▲ 이 사건 쟁의행위를 제3자의 불법행위와 같게 평가하기 어렵고, ▲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여한 비정규직 근로자들만에 의한 추가 생산이나 부족 생산량 회복은 상정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 A사의 생산관리체계를 통한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회복된 것을 오로지 A사의 노력으로 인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음.</p> <p>③ A사는 부족 생산량 회복을 위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일정하게 지출하는 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의 고정비용은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을 만회한다고 하여 그에 비례하여 더 지출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는 생산 감소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여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었을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소극적 손해’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반하여, A사가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별도의 비용은 그와 성질을 달리하는 일종의 ‘적극적 손해’로서 별도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추가 생산을 통한 부족 생산량 회복을 부정하고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발생 추정을 유지할 수는 없음.</p>
<p>시사점</p>	<p>○ 금번 판결은 불법 쟁의행위 이후 상당 기간 내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회복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회사만이 피해를 감수케 함.</p> <p>- 금번 판결에 따르면 불법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적절한 기간 내 생산 물량이 회복될 경우 조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짧은 시간 동안의 불법 점거행위에 대해서는 피해가 분명함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제한될 것임.</p> <p>- 특히 불법 쟁의행위 이후 상당 기간 내에 부족 생산량 만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며, 생산 중단 기간의 영업 기회비용 손실 등에 대한 회복은 불가능한데도, 이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피해자인 회사의 몫이 됨.</p> <p>○ 법원은 추가 조업을 통해 당초 계획된 생산량이 복구됐다는 점을 근거로 기업의 손해 발생을 부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바, 기업이 자구노력을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것을 이유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2월 13일에도 동일한 법리를 근거로 노조의 책임을 부정하고 회사만이 피해를 감수케하는 판결이 4건 선고되었음.</li> <li>- 회사는 불법 쟁의행위가 없었더라면 더 많은 생산량을 더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추가 조업을 통해 전체 생산량이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배상할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li> <li>-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생산·판매 기회를 상실한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바, 법원은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li> </ul>
--	--